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인공지능 및 커뮤니티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조상규
수시 과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이세진
	국가민속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방안 연구	김가람
	미래지향적인 법제를 위한 건축법 정비 방향과 과제	유광훈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기본과제

① 인공지능 및 커뮤니티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건축법령은 복잡한 구조와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령 해석이 어렵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참조되는 법령만 200여 개 이상이며, 연간 1만여 건의 질의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등 국민 불편은 물론 민원 대응에 따른 행정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인 Archilaw를 개발하였으며, 2024년까지 2단계 시스템(V2)의 공개 테스트를 통해 최대 82%의 질의응답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답변의 정확도 향상, 최신 법령의 신속한 반영, 신뢰성 제고 등 실무 적용을 위한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Archilaw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최신 법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사용자 및 전문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커뮤니티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답변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원 대응 효율성을 제고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원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사례로서 다른 공공 행정 분야의 법령 해석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상규

수시과제

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홍보하고,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자 다양한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공공조형물 설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에도 시군 경계 진입도로변에 각종 공공조형물을 활발하게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공공조형물로 인해 도시공간 및 경관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접한 공간에 공공조형물을 중복 설치하여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하거나, 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공공조형물이 공간 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며, 설치 이후 관리 부재로 인한 방치와 잇따른 철거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번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설치 이후 유지관리, 운영, 철거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인력 투입을 요구하므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하고, 각 자치단체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2025년 1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 175개 등 전국 76.5%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근거법이 없는 여건에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현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쟁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조형물이 도시의 장식적 요소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경관 향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

이세진

②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방안 연구

국가민속문화유산(구. 중요민속문화재)은 국보, 보물, 사적과 함께 지정 문화유산 4개 유형 중 하나로, 한국민족의 생활문화 특색을 나타내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개별, 집단 문화유산이 그 지정 대상이다. 주거유형으로 한정하면, `25년 3월 기준, 지정건수는 가옥이 172건, 마을이 8건, 총 180건이고, 지정범위 내 가옥을 합산하면 1천여 채의 전통가옥이 지정되어 있다.

전통가옥의 공간은 대부분 조선시대 주거생활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거주자들로부터 화장실 및 욕실, 보일러실 등의 물사용공간 설치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2011년 문화재청 고시로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생활기본시설(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하여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내에 설치한 화장실 및 욕실 등 물사용공간이 용도 특성상 수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분은 전통목구조에 악영향을 주거나, 습한 환경으로 해충이 발생하는 등 거주자의 안전과 위생환경이 위협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시설의 바닥배관 설치 과정에서 마루나 구들이 일부 철거되는 등 가옥의 원형이 훼손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거주자의 위생과 관련된 화장실 및 욕실 등 물사용공간은 공간을 확장하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행위로 인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저해되거나 설치방법에 따라 오히려 거주자의 불편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민속문화유산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화장실 및 욕실 등 물사용공간의 외부설치를 위한 적정방안과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자 생활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김가람

③ 미래지향적인 법제를 위한 건축법 정비 방향과 과제

「건축법」은 건축물을 조성하는 기준과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건축법」은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조성에 대한 기준과 함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 이래 2회의 전면개정과 148회(‘25.5.30. 기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불명확한 법령 적용 기준으로 추가적인 유권해석 필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간 상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자체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 조례·규칙·기준 간 상충 등의 문제와 지자체의 비공개 내부지침 운영, 관계공무원의 소극 대응, 행정담당자 및 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건축행정 절차 지연으로 국민·기업의 불편 심화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규제와 건축행정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선행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여, 「건축법」을 정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혁신과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입법 실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홍

④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 예외규정은 1978년 「건축법 시행령」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락의 층고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몇 차례 법령 개정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기준은 여전히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면적 산입 예외 규정으로 인해 다락 공간은 서비스 공간으로 여겨지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의 명확한 정의나 설치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락은 물건 저장 등 부수적 용도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놀이공간이나 취미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재실자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다락 설치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법령상 위임 없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그림자 규제(임의 규제)’에 해당하며 건축주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다락에 대한 법적 기준의 미비를 악용한 사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층고 기준 이하의 다락을 복층형 오피스텔로 분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다락 설치기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다락 설치와 관련된 건축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그림자 규제(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여경

포럼 및 세미나

2025 제1, 2회 보행공정포럼 개최

auri 소식

Vol. 58

Summer 2025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는 2025 제1, 2회 보행공정포럼을 4월 11일(금), 5월 30일(금) 양일에 걸쳐 인스파이어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행안전 정책에 대한 공감과 실천적 논의를 확산하고, 유관 기관 간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제1회 보행공정포럼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자전거/PM을 고려한 교차로 처리방안 - 자동차 소통싸움에 보행자와 자전거/PM의 등이 터질까?’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장)이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우훈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송기황 한국도시설계학회 자전거친화도시연구위원장,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행자·자전거·PM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보도 위 이륜차 통행의 위험성 - 보행안전과 공존을 위한 해법은?’을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보행공정포럼에는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윤호 안전실천시민연대 처장, 조용상 서울시 구로구청 교통전문관, 김태호 와이비에스 교통본부장,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장)이 참여해 보도 위 이륜차 문제 해결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갔다.



2025 건축공간연구원-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제도적 기반을 둔 AI 그리고 ESG’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는 4월 22일(화)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적 기반을 둔 AI 그리고 ESG’를 주제로, 박보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박한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안익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인공지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강경호 (주)ANU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사장이 ‘건축계의 AI 활용과 ESG실현 방안’을, 세 번째 발제는 최신영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말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제도화 방향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박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ESG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모든 발제자가 참여한 가운데 각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다.

건축공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농촌공간계획 정책세미나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4월 25일(금) 서울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에서 농촌공간 계획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을 주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공간 전략과 제도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문채 성결대학교 교수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한계, 농촌계획과의 연계방향’을 주제로 국토계획 체계 속에서 농촌공간계획이 가지는 법적·제도적 위치와 발전 가능성을 발표하였고,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농촌 토지이용의 특성 및 관리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영숙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소장이 ‘부여군 계획 수립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토 공간관리를 위한 도시·군계획 및 농촌공간계획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성상명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지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농촌공간계획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릴레이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재생학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3차에 걸쳐 학술교류 릴레이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분야별 연구성과와 지역 현장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생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차 세미나는 5월 8일(목),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의 주관으로 ‘마을재생 × 지역관리’를 주제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공공적 활용과 지역 기반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하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공공시설로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주제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공공적 기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이태호 왕영 대표는 ‘동네기반 연결형 거버넌스와 연결자가 이끄는 지역관리: 어궁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지역 주민 중심의 실천적 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형성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과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노진현 대전 대덕구 주무관이 참여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 실천 주체와 제도적 연계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2차 세미나는 6월 13일(금)에 건축공간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주거정책 × 청년주거’를 주제로 박성한 건축공간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청년가구 주거 수요와 비아파트 주거 생활 공간 실태’ 발표에 이어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비아파트의 임대상품화와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주거의 현실과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 세미나는 7월 2일(목),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의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고령친화 ×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
‘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개최



부산도시공사-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 공동세미나
‘지역주도형 도시재생과
민관협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년학회는 5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초고령사회의 본격 도래에 대응하여 Age-Tech 기반의 주거 및 돌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 국장,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총 세 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 팀장이 ‘국내·외 Age-Tech 산업 동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박형순 KAIST 헬스사이언스 연구소 소장이 ‘Age-Tech 로보틱스 기술 현황 및 고령자 돌봄사업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Age-Tech 기반 고령자 주거 실증 모델과 공간 적용 전략’을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영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장, 권진희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신영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장이 참여하여 Age-Tech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과 부산도시공사, 한국도시재생학회와 함께 6월 5일(목)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개회사와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정기욱 부산도시공사 대리의 ‘부산 지역재생의 현황’에 대한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희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이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전시 사례’를 주제로 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과 과제 및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은호 모라비안앤코 커뮤니티브랜딩 본부장이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민관 소통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혜리 부산도시공사 센터장,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 변혜선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원 단신

auri 소식
—
Vol. 58
Summer 2025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3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 연구성과를 더욱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은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과 정책수요자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해 건축 및 도시공간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1부 ‘공간혁신’과 2부 ‘공간복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부는 허한결 부연구위원이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산사태 리스크 분석 및 건축물 단위 재난 리스크 간 연계 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로 시작하였다. 이어 남성우 부연구위원은 ‘도시항공교통 옥상버티포트 설치를 위한 건축물 선정 기준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송유미 연구원은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연구’ 발표를 통해 건축물 노후도 파악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를 설명하였다.

2부에서는 김용국 연구위원이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여혜진 연구위원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정책 지원사업’, 방재성 부연구위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좌장), 김세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수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학기술서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한국지역학회 2025 춘계 공동학술대회 AURI 세션 ‘유휴공간 재생과 지역상생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5월 22일(목) 세종 정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린 포상식에 참석하여 관련 상을 수여받았다.

이날 포상식에는 우수 실천과제 부문에 선정된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체계 마련’과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장소 단위 통합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 마련’ 연구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공간의 가치제고를 위한 실요성 높은 연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24일(토)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유휴공간 재생과 지역상생 전략’을 주제로(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한국지역학회 2025 춘계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며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auri 세션에서는 ‘중소도시 및 도심 유휴공간의 재생 전략과 지역 상생 방안’을 주제로 실제 현장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도시 유휴공간 재생, 지역을 잇는 공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상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은 ‘도심 유휴 시설을 활용한 지역상생 전략 - 대구 도심 캠퍼스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호정 단국대학교 교수,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휴공간 재생 및 공간전략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도시설계가 되어보기(CPTED)’ 개최



20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3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우리동네 도시설계가 되어보기(CPTED)’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도시설계에 직접 참여하며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운영되어온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세종시 반곡중학교 학생 19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원 견학과 연구원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동네의 도면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상해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도시설계, 조경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마무리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도시와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6월 27일(금) 영주시에서 ‘20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건축디자인 통합전략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영주시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에 대한 현장답사가 함께 진행되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지역 맞춤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영주시가 제도를 도입한 초기 단계부터 시범연구(2007~2008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도시건축디자인 전략계획 수립 및 지역활성화 디자인 관리체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영주시 사례를 포함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공간환경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